

지방의 새로운 도약! 「지역균형발전포럼」 개최

- 26일 국토부-토지주택연구원(LHI)-지방연구원 맞손...
 지역맞춤형 국토교통 균형발전 전략 구상 논의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9월 26일(화)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(LHI)이 주최하는 「지역균형발전포럼」에 참여하여 지역맞춤형 국토교통 균형발전 전략 수립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.
 - 이번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,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,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,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 등 관계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과 부산연구원 등 9개 지방연구원 등 관계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.
- 국토부, 산업연구원, 부산연구원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등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지역맞춤형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.
 - 특히, 국토교통부 윤의식 국토정책과장은 국토부가 초광역권 계획수립, Compact & Network 구축 등 “스마트 지역발전 5대 전략”을 통해 지방에 전례 없던 기회를 창출하고, 연결하고, 확대하는 전략구상을 발표한다.

<스마트 지역발전 5대 전략>

	주요 내용
① 초광역권 계획	국토 경쟁력 재고를 위해 국토 공간구조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 하고 산업·문화·관광 등 기능을 강화
② Compact & Network 구축	도심융합특구, 기업혁신파크, 국가산업단지 등을 통해 거점을 육성 하고 광역철도·순환도로 건설 을 통해 지방의 접근성 제고
③ 맞춤형 규제혁신	기업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유연화 , 토지이용규제 개선 , 도시계획 3종 혁신 등을 통해 규제를 혁신
④ 과학과 실증 기반 국토정책	생활인구에 기반한 국토·도시계획 지원 , 국토모니터링 통한 인구고용 거점 분석 , 계획·사업·평가 기반 성과지향 국토정책 수립
⑤ 소통의 창, 균형발전지원단	중앙정부-지자체-전문가가 소통하여 전략 수립하는 균형발전 지원단 과 현장방문 을 통해 답을 찾는 지역발전협력회의 운영

-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은 “이번 포럼에서 균형발전 의제 발굴, 혁신적 국토 공간구조의 개편, 미래를 조망하는 SOC 체계 등 균형발전의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윤의식 (044-201-3646)
		담당자	서 기 관	김종성 (044-201-4733)
			사 무 관	신용화 (044-201-3651)
			주 무 관	주희규 (044-201-4952)



참고 2 지역맞춤형 균형발전 전략

※ 해당 구상은 균형발전 구현을 위한 구상단계 논의로서,
관련 내용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 예정

- ① (초광역권 계획) 단위별 행정구역을 넘어선 기능과 연계 중심의 초광역 단위의 지역발전 전략구상
 - (국토계획 패러다임 전환) 행정구역 중심의 경직적 국토계획을 전환하여 기능별 연계, 유연한 연합, 초연결을 지향하는 국토계획 마련
 - (초광역 계획 수립지원) 부울경·충청권·남해안 등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는 자생적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지원
- ② (Compact & Network 구축) 권역별로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기회를 창조 및 연결하는 성장거점 육성 및 교통망 지원
 - (기회의 창조) 도심융합특구, 국가 산단, 기업혁신파크 등 권역 거점과 캠퍼스혁신파크·지역활력타운 등 지역 거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
 - (기회의 연결)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권역별 5대 광역철도 및 방사순환형 도로 지원, 거점공항 및 연결교통망 건설
- ③ (맞춤형 규제혁신) 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적기·적소에 해소하기 위한 지역·기업 맞춤형 규제개선 추진
 - (기회의 확대) 기업성장 걸림돌 해소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유연화, 토지이용규제 개선, 3종 공간혁신구역 등 추진
- ④ (과학 및 실증 기반 국토정책) 데이터와 AI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과학적 공간정책 기반 마련
 - 마이크로 공간 단위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수집·분석·학습을 통해 생활인구, 기능별 거점 등에 기반한 국토계획 수립 지원
- ⑤ (중앙-지방 협력체계 구축) 중앙정부-지자체-전문가가 소통하고, 현장방문을 통해 답을 찾는 소통과 협업의 창, 균형발전지원단 운영